

합형으로서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한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근의 도시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지정된다. 개발촉진지구는 각 도별로 총면적의 10%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매년 전체 도면적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지역 실정에 밝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촉진지구의 지정범위와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주관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복합단지개발로서 주거용 건축, 공업용시설, 교육·연구용 시설, 문화·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복합단지라 하는데 민간이 복합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참여형태

지역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형태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

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참여가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민관합동개발인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 등이 민간기업과 법인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공공기관은 주로 용지매수와 행정상의 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은 자금의 조달과 부지조성사업의 추진,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민간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민간기업들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

5) 최근의 민자사업 동향

지난 '99년 4월 민간투자법을 전면 개정, 시행한 후 현재까지 민자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다면, 비교적 꾸준하고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올해만 해도 SOC 민간투자지원단(단장: 기획예산처 차관)이 구성되고,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 등 8개의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협상기간이 길어지는 등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대구-대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일산-퇴계원)순환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부산신항만, 목포신외항 등 대형사업들을 비롯하여 약 8